

## 정부가 대국민 약속대로 증권거래세 인하(0.23%→0.15%) 초부자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100억원으로의 상향 철회시 민주당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2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당시 금융실명제와 전산화 미비로 인해 주식 양도차익 파악이 어려워 매도금액의 일정률 방식으로 과세방법을 마련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투자손실과 이익여부에 무관하게 매도금액의 0.23%를 징수하므로 올해와 같은 폭락장에서도 막대한 세금을 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특히 반대매매로 강제로 주식을 처분당할 때마저도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만 해 가혹하고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또한 증권거래세만으로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원칙을 구현하기 어려워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가 대주주에 한정하여 도입되었으나, 대주주 기준에서 빠지기 위해 연말마다 대량 매도 현상을 촉발하여 개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유발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가 흡수·폐지되므로 이러한 부작용도 사라지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증권거래세의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의 금투세로의 흡수 폐지 3가지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 문제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국회가 여야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당시 정부는 같은 세수만큼의 증권거래세를 줄이기 위해 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김성환 의장은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하락장에 큰 손실을 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당초의 약속대로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정부 세계 개편안처럼 0.20%가 아니라 0.15%로 제대로 낮추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적인 바와 같이 그간의 오랜 정책방향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며,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첫째, 증권거래세를 당초 국민께 한 약속대로 0.15%로 낮춰 손실과세 문제를 축소하고, 둘째,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철회한다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들 2가지 조건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이들 선행조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고 요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가동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상품별로 제각각 달라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들처럼 투자손실과 이익을 함께 반영하여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공제해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갈 예정이다. 끝.

2022. 11. 18.(금)

  
정책위원회 의장 김 성 환